

# 영광 핵폐기장 건립 공식화...주민 거센 반발

###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공청회...지역민 의견 빠진 법안 폐지 촉구 "기약 없는 방폐장 건설 때까지 임시저장...영구처분시설 아니냐"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고준위 특별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3개의 '고준위 특별법안' 모두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정부가 중간·영구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영광에 원전뿐 아니라 핵폐기장까지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인한 것이냐 따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노후한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운영이 가장 큰 걸림돌인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영광 원전 내부에 생기면 부실시공의 대명

사인 한빛 원전 3·4호기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 쓰고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방사선 세기가 강한 것으로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특별법 처리에 앞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역민들의 참여는 배제됐다.

이에 공청회 직전 영광을 비롯한 전국 원전 소재

지역 시민단체와 탈핵·환경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 난제다"면서 "해법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임시저장' 또는 '부지 내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주민이 떠안으라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전국 220여 단체는 기자회견후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국회 산자위에 제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3개 법안(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안,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자리다.

이들 법안은 명칭이나 세부 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은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조지인 '계속운영'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해 원전 부지에 설치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40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정해 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밝힌 법안에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에 대해 '계속운영을 포함한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원전의 계속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거침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심사에 들어가 '국회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정운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준위 방폐장 완공 시기를 정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4명 중 1명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며 일정을 고정하자고 주장했고, 나머지 3명은 지역민과 합의를 통해 시기를 조절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중간저장시설

이 결국 영구처분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지만, 원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주민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민과의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노병남(60)씨는 "고준위방폐장이 건설될 때까지 임시로 저장시설을 지어 핵폐기물을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영구처분시설이다"면서 "그동안 한수원 등이 지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한수원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인 상황이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평생을 영광에서 산 주경재(59)씨는 "처음에는 임시저장시설이라고 하면서 짓겠지만 결국에는 영구처분시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면서 "정부가 지원금을 무기로 설득하면 주민들이 의견이 양분돼 갈등의 반목이 커질 것인데 후손을 위한다면 영광에 핵폐기장이 설치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정부의 대외 외교와 강제동원 방안에 대해 진단하고 논의하는 토론회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정부안’ 효력 없다”

역사정의행동 국회서 토론회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3자 변제'로는 피해자의 승낙 없는 경우 미쓰비시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6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일제사정의평화행동 주관으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하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의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 임재상·김정희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박래형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변호사), 김창록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2일 외교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논의가 많지 않아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제3자 변제'는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피고 기업들 이외에 제3자는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민법상 채권자가 돈을 받았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다"면서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수익 의사표

시가 없다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공탁 역시도 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리의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공탁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제도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제3자 지급으로 대법원이 내린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광주 동구 교통문화지수 '전국 하위권'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등 E등급

광주시 동구가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E등급을 받아 전국 69개 구 중 67등에 해당하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다. 각 항목은 횡단보도 정지선·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폰기 사용률,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겼으며 A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광주시는 C등급을 받았는데, 100점 만점에 81.64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9등에 그쳤다. 전남도는 총점 81.05점으로 D등급에 해당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12등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시 동구는 총점 73.91점으로 운전행태 43.68점(55점 만점), 보행행태 16.67점(20점 만점), 교통안전 13.57점(25점 만점)을 받았다.

동구에서는 지난해 보행 사망자 3명, 사업용 차량 사망자 1명이 발생해 교통안전 항목의 점수가 크게 깎인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이 총점 88.86점으로 A등급을 달성, 전국 79개 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올리고 교통문화지수 최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안전띠 착용률은 떨어지고 운전 중 스마트폰기 사용률은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 2018년 88.08%에서 지난해 83.02%로 떨어졌으며, 운전 중 스마트폰기 사용률은 2018년 28.7%에서 지난해 41.77%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전남 주요 대학 등록금 동결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이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전남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학부 평균 200만원선이다.

다만, 대학원은 계열에 따라 2~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대는 15년째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다. 조선대 1년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580만

원, 자연과학계열은 762만원선이다.

광주대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다. 광주대도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다.

동신대도 학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법정 상한을 4.05%로 공고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절판 판매중

이방인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